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운천·김광수 의원,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정 "신소재 중심 기기 육성 의료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김 "영세성으로 인해 경쟁에 밀려 정부 지원 필수" 강조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울)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의료기기단체, 학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 국내 의료기기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해외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는 4차 산업, 융합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탄소소재와 같은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신소재 중심의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영세성, 기술장벽으로 인해 막강한

자급력과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20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한동욱 교수(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교)의 생체재료 의료기기 기술현황 및 사례 발표와 고명환 교수(전북대학교병원)의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성 발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봉주 교수(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박희병 전무이사(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강태건 교수(고려대학교의료원), 모두순 팀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성 기자

"정부 국정목표 실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김종식 도의원, "학령인구 감소 따른 교육재정 축소 시도 불합리"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지난 9일 임시회에서 발의한 「교육재정 축소시도 즉각 중단 및 고교 무상교육 조속실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가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정부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 의원은 "정부의 행태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대선공약과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과 재정당국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올해 2학기에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그리고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

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약 2조743억 원으로 추정. 현재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 약 0.8%포인트 정도를 더 올려야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악영향을 반영해 교육예산을 먼저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두고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국무총리의 답변, 그리고 재정당국의 입장이 다 제각각인 상황에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농산경제위, 일자리경제국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0일 제362회 임시회 기간에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청년 지원사업이 단기 처방에 그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지역청 지원금이 월30만원에 불과해 지역의 청년유출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년 문제와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기업 홍보관련 사업의 디자인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개별 마을기업의 개성과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동일 사업의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핀테크기업 등 금융기업 창업을 위해 업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사업'이 핀테크 기반 청년창업준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각각 투자금용과와 일자리정책관실로 분리됐으며,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도 각기 다른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다. 강 위원장은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비효율을 야기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31

억원 이상 과도하게 삭감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으며, 노후화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용구 위원장의 주문도 뒤따랐다. 오영근 의원(정주2)은 "금번 예산안을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는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지는 의문이다"면서 청년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읍당 비례)은 "고용 위기지역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3개월짜리 단기처방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시간을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62→70%' ... 2023년까지 41.6조 투입

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진 문재인케어 예산 30조 6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해 60% 초반대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필수검사에 해당하는 MRI와 초음파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검사는 올해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보장대상 확대
영유아·난임부부 등 건보 적용 늘리기로

이어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 순으로 확대되며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다음으로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순으로 진행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및 중증질환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3200여개 항목과 보험은 적용되나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암환자·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 400여개 등 3600여개 항목도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건

강보험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삼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7월엔 병원·한의원 2·3인실 삼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년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삼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진단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영유아, 난임부

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가됐다.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1세 미만은 기존 21~42%에서 5~20%로,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로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중증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어린이 특화 진료 기반을 구축한다. 난임치료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분산돼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통합·정비하

기로 했다. 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서고 각종 의료지원사업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암 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건강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부터 우선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충실히 제공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1조5800억원이다. 여기에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30조 6000억원에 6조4600억원이 추가됐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100
대한민국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4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00주년